

현장과 시각

‘춧불’보다 급한 건 한우대책



이종태

경제부 부장

춧불시위로 표출된 상난 민심을 어느 정도 잠재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쇠고기파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미국측에 30개 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측의 답이 올 때까지 고시와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참고에 보관중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과 유통은 물론 신규 수입이 전면 보류되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붓물처럼 터진 개방 위기에서 벼랑끝에 내몰린 축산농가가 앞으로 소를 사육할 수 있겠는가의 의지와 희망의 여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함께 나온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바 있다. 이와 관련,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들은 사료값이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폭등한 반면, 소값은 30~40% 폭락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한심한 대책’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혀를 차고 있다. 축산농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우선 사료구매자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나주에서 한우 40마리를 키우는 K모(66)씨는 “사료구매자금의 급리를 내리면서 상환기간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된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송아지를 입식한 후 출하하려면 적어도 24개월은 키워야 하는데, 1년 뒤부터 자금을 갚으라는 것은 소를 키우다 말고 출하하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T모(46·화순)씨는 “사료구매자금을 농가에 융자금으로 나눠주지 말고 차라리 사료회사에 가격 인상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영성하기 짝이 없다. 고시 내용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의 일부만을 보전해준다고 돼 있다.

김남배 전남한우협회장은 “전면개방이 이뤄지면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65만원을 보전해 줘야 하지만 정부보전안은 30만원이 상한선이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축협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를 한우안정기금으로 조성, 한우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의 항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규모 농가들은 법적 요건이 안돼 자금지원은 받을 수 없는 만큼 축산업에서 손을 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 오직 소값만 떨어지고 있다고 한숨짓고 있다.

지금 정부는 오로지 쇠고기 파동과 춧불시위에 매달려 진화에 급급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는 축산농이 핵심인만큼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jilee@kwangju.co.kr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한·미 국방장관 합의 “2012년 전작권 이양”

한·미는 3일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양국 정상 합의의 함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상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그 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2만8천500명) 유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두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2012년 4월17일을 전한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회담에서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 조정 여부와 관련,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역량을 두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전력

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전력 조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은 아파치 헬기 등의 차출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것에 유의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외교·국방당국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미래 비전’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 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긴밀히 협의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 및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장 7명 재신임 11명 교체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통일연구원장과 노동연구원장 등 11명이 교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3일 “총리실 관리·감독을 받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8명 기관장 가운데 7명을 재신임하고 나머지는 사표를 수리하기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면서 “경력, 연구평가, 재임기간, 내부

승진 케이스 등을 여러 기준을 고려해 사표수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개 기관장 중 교체 대상자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된 김형진 한국교통연구원장,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황성현 조세연구원장 등 11명이다. /연합뉴스

오바마, 경선 승리 초읽기

美대선 흑백대결 가시화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150여일만에 걸쳐 벌여온 피말리는 대선 후보 경선이 빠르면 3일(미국 시각) 오바마의 승리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흑인 미국 대통령 후보의 탄생을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11월 본선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오바마간의 사상 첫 흑백대결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된다.

힐러리는 그러나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에서 오바마에게 절대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선 완주를 다짐하며 당연직인 슈퍼 대의원 확보에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쏟고 있어 경선 결

과에 대한 승복 여부가 주목된다.

오바마는 3일 몬태나와 사우스 다코타에서 마지막 경선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총 2천73명의 대의원을 얻어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 대의원 2천118명에 45명을 남겨두고 있다고 AP통신은 집계했다. 힐러리는 1천915.5명의 대의원을 얻어 산술적으로 역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바마측은 31명의 대의원이 결린 몬태나와 사우스 다코타 프라이머리 승리가 유력한데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200명 가량의 슈퍼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3일 경선 레이스 종료에 맞춰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 빠르면 이날 중으로 ‘매직넘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방문 72시간전 입국등록

비자면제국 국민도...내년 1월부터 한국도 대상

내년 1월부터는 유럽, 일본 등 미국 입국비자를 면제받는 국가의 여행자들이라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출국 72시간 이전에 미국 정부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도 내년부터 미국 비자면제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조치는 한국민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각)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비자 관련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FT는 국토안보부 관리의 말을 인용

해 미국이 이러한 새로운 비자 관련 규칙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비자면제국 국적을 가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 관리의 “비자를 받기 위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의 여행자들이 덜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점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은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8월부터 입국 등록을 할 수 있

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비자 면제국 국가의 여행자들은 여행사 및 항공사 웹사이트나 미 정부가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입국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는 전했다. 미국 입국시 비자를 면제받는 국가는 현재 모두 27개국으로, 대부분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이며 일본,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도 비자 면제국에 포함된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체코, 헝가리 등 8개국을 추가로 비자 면제국에 포함시키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은 2일(현지 시각) 뉴욕 코리아사사이어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 의회 비준안 처리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재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마영남 주미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랑겔 위원장, 이태식 주미 대사. /연합뉴스

“한미FTA 11월 대선 이후에나 논의”

찰스 랑겔美好원 세입위원장 “쇠고기 재협상 안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찰스 랑겔(뉴욕)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논의가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FTA 통과에 큰 영향력을 가진 랑겔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통상문제를 관할하는 랑겔 위원장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재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랑겔 위원장은 2일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이태식 주미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의 코리아사사이어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11월

대선 전에 한국과 콜롬비아를 포함한 FTA 안건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의회 상정 전망을 묻는 질문에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교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설명한 뒤 “올해는 대선이 있고, 민주당은 대승을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FTA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들이 불평등한 교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대규모 무역적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나 콜롬비아와의 FTA가 문제가 아니라 “교역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정치적으로 지금은 FTA 상정을 거론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성을 갖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FTA의 재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랑겔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쇠고기 문제는 상원에서 다루고 하원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현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쇠고기 전면 재협상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A large section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legal notices regarding real estate auctions, including details about property locations, auction dates, and terms of sale.